문 전 대통령, "파탄 난 남북 관계, 안타깝고 착찹"

"군사합의 폐기는 무책임"

9 · 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서 尹정부 대북 강경 기조 비판

" '안보 · 경제 보수정부 잘한다' 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나야"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를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기념식 인사말에서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도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 모두, 관계가 악화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군사합의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준수하여 최악의 상황을 막으면서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며 "언젠가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간에도 군사합의를 더욱 발전시켜 재래식 군비까지 축소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계속된 무력 도발에 맞서 정부·여당에서 9·19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거나 폐기를 검토한다는 등의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부속합의서로 체결된 남북군사합의였다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육상, 해상, 공중으로 일정한 구역의 군사운용을 통제함으로써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을 방지할 목적으로 남북 간에 사상 최초로 체결된 구체적인 군비통제 합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군사합의는 지금까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문재인 정부 동안 남북 간에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희생된 사람도 없었다.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이다"고 짚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남북 합의 관련 이어달리기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면 남북관계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며 윤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이어달리기는 장시간 중단되곤 했다"며 "그럴 때면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평화 대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했고,

아까운 장병들과 국민이 희생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평화가 경제' 라는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민정부가 시작된 김영삼 정부부터 지금의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정부를 거시적으로 비교해보면 이어달리기로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며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경제의 규모, 즉 GDP(국내총생산)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뿐이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어달리기가 중단되었던 정부 기간에는 국민소득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5000 달러를 넘었는데, 지난해는 3만2000 달러 대로 국민소득이 떨어졌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적자 재정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국가부채율 증가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해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의 면모를 과시한 바 있다"고 자찬한 뒤 "오히려 재정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는데 적자 원인도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부자감세 때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진영외교에 치우쳐 외교의 균형을 잃게 되면, 안보와 경제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며 "동맹을 최대한 중시하면서도 균형 있는 외교를 펼쳐나가는 섬세한 외교전략이 필요하다"고 훈수를 뒀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정부의 안보 성적과 경제 성적을 비교해 보면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 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공식 행사 참석을 위해 서울로 올라온 것은 지난해 5월 퇴임 이후 처음이다.

행사는 김대중재단과 노무현재단 등이 공동 주최하고, 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 등이 공동 주관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행사 참석 전 장기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해 입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뉴시스

군산시의회는 19일 군산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새만금 SOC예산 삭감 규탄 범시민 집회' 에서 시민들과 함께 새만금 예산 삭감 철회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새만금 예산 삭감 철회하라"

군산시의회, 범시민 집회서 삭발투쟁 나서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19일 군산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새만금 SOC 예산 삭감 규탄 범시민 집회' 에서 시민들과 함께 새만금 예산 삭감 철회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집회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등 4,000여명의 시민과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정부의 새만금 SOC예산 삭감을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군산시민 모이자! 새만금을 지키기 위하여' 라는 전제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사전에 시민문화 공연이 펼쳐졌으며, 이래범 범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신영대 국회의원,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최연성 고문과 홍용승 공동위원장의 자유발언과 이래범 공동위원장의 성명서 발표가 이어지고 삭발식이 진행됐다.

삭발식에는 김영란·이연화 등 여성의원을 포함하여 김영일 의장·김우민 부의장·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김경식 윤리특별위원장·박경태 의원·서은식 의원·양세용 의원·한경봉 의원 등 군산시의회 의원 12명과 범시민위원회 이래범 공동위원장·문남철·박충기·이희풍·김용화 등 5명의 시민 대표들이 참여하여 새만금 사수에 대한 굳은 의지를 다졌다.

이래범 범시민공동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발언을 한 신영대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상정할 때는 새만금 예산이 모두 반영되었는데, 잼버리 이후에 정부가 예산을 거의 삭감했다"며 "삭감된 예산을 반드시 복원시킬테니 군산시민들이 힘을 받쳐달라. 군산시민이 하나되어 새만금을 사수하자" 고 성토했다.

김영일 의장은 "늦더위로 아스팔트의 열기가 뜨겁지만 군산시민의 열정과 군산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뜨겁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의 꿈과 희망을 짓밟아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기필코 이길 것이다."며 "지금까지 있지도, 보지도 못한 예산삭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새만금에 와서 동북아의 신허브를 만들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오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삭감했다. 정부는 대한민국을 구석구석 균형발전을 시킬 책임이 있는데 행사를 잘못한 분풀이로 예산을 대폭삭감하는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분노했다.

아울러 "이는 전북을 죽이겠다는 정치적 갈라치기다. 정부는 군산시민은 물론이고 전북도민의 자존심과 희망을 짓밟고 있다"며 "군산시민은 역전의 명수라는 힘이 있다. 군산시민이 이런 정부에 더 이상 짓밟힐 수 없다. 짓밟는다면 가만히 안 있겠다.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군산=김판곤기자

김충영 익산시의원, 마동 근린공원 조성 현장 방문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중앙, 평화, 인화, 마동)은 지난 18일 마동 민간공원 조성사업 인근 지역의 현장 행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 해결에 적극 나섰다.

지난 5일간의 가을장마로 마동 민간공원 조성사업 공사현장 인근에서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침수되는 지역이 발생하고, 토사가 쓸려오는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해 해당 지역 주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구의 해당 사고 발생지역을 발 빠르게 방문해 점검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수단이 동원되도록 담당부서장에게 직접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김 의원은 "국지성 호우로 인해 과거보다 호우피해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익산시도 타 지자체와 같이 항상 호우 피해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동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된 바, 앞으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사진 가운데)과 문승우 의원, 권요안 의원이 19일 전북도청 3층 중회의실에 마련된 감사장을 찾아 도의회 입장문을 전달했다.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잼버리 전북도 감사, 진실규명 위한 감사 돼야"

도의회 새만금 대응단, 감사장 찾아 입장문 전달

"잼버리 지자체 책임 전가 · 정치 감사 결사반대"

전북도의회 새만금 대응단(단장 국주영은)은 19일 감사원의 새만금 잼버리 전라북도 감사에 대한 도의회 입장문을 전달했다.

새만금 대응단 국주영은 의장(전주11)과 김정기 의원(부안), 권요안 의원(완주2), 문승우 의원(군산4)은 이날 도청 3층 중회의실에 마련된 감사장을 방문해 감사원 관계자를 만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감사를 요청했다.

도의회 새만금 대응단은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소재와 진실규명 감사는 동의하나 잼버리 파행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려는 감사라면 반대한다"며 "특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감사라면 500만 전북인을 대표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과 조직위원회 종합계획안 등 관련법률 어디에도 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 연맹과 한국스카우트 연맹 공동 주최이고 주관은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라며 "전북은 권한이 거의 없고 잼버리 계획부터 예산수립, 집행까지 조직위와 여가부가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는 전라북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장실과 샤워장, 폭염 문제 등은 이미 1년 전 국정감사를 통해 우려가 제기됐으나 폭염 대비 예산 반영 요구에 기재부는 마이동풍이었다"며 "국무총리부터 여가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장관은 잼버리 개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며 "앞으로 있을 국제대회 운영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답변했다. /김재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도내 기초의회 임시회 개회… 의정활동 본격

무주군의회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는 19일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무주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및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1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4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 3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무주군의회 황인동 의원이 '무주군 재정전략 및 조직 혁신방안 제언' 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문은영 의원이 '무주군 반려친화 관광 제언' 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의회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5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19일 본회의에서는 유경자 의원의 '장수군 1인 가구 지원 정책 방안 마련' 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15건의 안건과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날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한주 의원의 발의한 '장수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 제·개정되면서 의원들의 군에 대한 고민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수=고판호 기자

순창군의회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는 19일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3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동의안 등 21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오수환 의원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는 시점에 이번 추경예산이 적시에 투입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하겠다"며 이번 추경심사의 각오를 다졌다.

또한, 최용수 의원은 후쿠시마 수산물 전면 금지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를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며 정부에 강력히 주장했다.

/순창=이양원기자